

| 특집 | ③

쟁'이란 용어로, 민중이 주체가 됐다는 점을 부각시킬 경우 '민중항쟁'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용어는 무조건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존중해 주기도 한다. 특정 사건이 실질적인 변화를 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지향점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용어 규정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특정한 역사적 사실과 그 맥락을 어떠한 성격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이다.

4·19 시기는 이승만 정권의 몰락 후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발전 전망을 두고, 여러 사회집단들이 논쟁과 갈등을 벌였던 시기이다. 통일논의는 물론이고 경제개발 문제, 민주화, 냉전체제의 극복 방안 등 여러 차원의 논쟁과 갈등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4·19의 용어 규정과 성격은 이러한 논쟁과 갈등을 당시의 주·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5월~~

## 5·16,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노영기

1961년 5월 16일 새벽을 가르는 총성이 울렸다. 정치군인들이 총칼을 들이대며 4·19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출범한 장면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로부터 한동안 한국 사회는 군부가 지배했다.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이른바 '혁명공약'을 발표하고 재빠르게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다. 현상적으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져 결코 넘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보릿고개'를 넘었다. 국토방위에 전념해야 할 군대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 적어도 문민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모두 군인 출신이었다. '상명하복'의 군대문화가 병영을 벗어나 민간사회로 옮겨졌고, '군사문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중대한 전환점이 됐던 5·16쿠데타가 가능했던 이유, 누가 주도했으며 어떻게 진행됐고, 한국 현대사에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보겠다.

### 양날의 칼, 한국군의 성장

한국전쟁을 거친 뒤 한국군은 양적 팽창과 조직 재편을

노영기 \_ 조선대 강사, noyoungi@daum.net

이루었다. 또 미국의 지원과 지휘 아래 질적 발전을 꾀했다. 미국은 1950년 7월 14일 ‘대전협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유엔군 사령부-한국군’의 지휘계통을 통해 한국군의 훈련과 무장 등 거의 모든 면을 장악했다. 미국은 1954년 11월 17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 군사원조를 실시했다. 미국의 원조로 1960년까지 만여 명이 넘는 군인들이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 이들을 통해 한국군의 미국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한국전쟁기에 한국군은 정치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다. 부산정치파동이 일어났을 때 헌병대에서는 국회의원 통근 버스를 납치했고, 육군본부에서는 이것을 견제한다며 이승만 제거를 검토했다. 특무대 또한 부정 선거에 직접 관여했다. 헌병대와 특무대는 경쟁적으로 군대를 사찰했다. 더 나아가 결코 제 임무가 아닌 민간 사찰과 정치 공작에 까지 손을 뻗었다. 이승만은 자신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두 사찰기구를 통해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 아래 있는 한국군을 적절히 통제했다.

또 이승만은 한국군 창설 때부터 형성된 군부 내의 파벌을 적절하게 이용했다. 이승만은 이형근과 정일권 그리고 백선엽을 육군 대장까지 승진시켰고, 이들을 교대로 육군 참모총장과 연합참모회의 의장에 임명했다. 세 사람은 출신지에 따라 형성된 군부 내 파벌의 대표들이었다.

이승만의 군부통제 방식은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 출신지나 과거 경력 및 개인의 친소관계 또는 파벌에 따라 진급이 좌우됐고, 군부 인사에 경무대나 자유당 등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 군부와 정치권의 밀착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특히 3·15부정선거에 군이 조직

적으로 관여했다. 지휘 계통을 통한 투표 지령, 모의 투표, 장교부인 구락부 등의 선거 개입, 사찰기관의 감시, 대리 투표, 이중 투표, 무더기 투표, 사전 투표 등 많은 부정이 저질러졌다.

나라를 지키는 데 써야 할 국방비가 정치권으로 흘러갔다. 그에 따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군대 내에는 부정부패가 가득했다. 사병들은 소속 부대에 매달 납부할 돈을 마련하려고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녔다. 그 때문에 ‘몽둥이 후생사업’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군수 물자를 몰래 팔거나, 군량미 횡령, 휘발유 매각 등의 부정부패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결국 살기 위하여 장관은 ‘트럭’으로 날라다 먹고, 장교는 ‘짚’ 차로 날라다 먹으며, 하사관은 등(背)으로, 사병은 반분(飯盆)으로 날라다 먹으니 피차 마찬가지로”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왔다.

한편 군부 내에는 권력과 유착된 상급 장교들과 다른 세력들이 있었다. 이들은 상급 장교들의 권력독점과 진급 적체로 인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 중에는 민간사회와 쉽게 접촉할 수 있었던 육군본부 정보국 출신이 있었다. 이 기구는 ‘유엔군 사령부-육군본부’의 아래에 있었던 까닭에 이승만 정권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이들은 업무 특성상 민간사회의 동향을 예의 주시했고, 정치적 격변기에 직접 정치에 개입하려는 성향을 띠었다. 5·16쿠데타를 기획했던 김종필은 1961년 2월 8일 강제 예편될 때까지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 근무했고, 이 기구에서 근무했던 육사 8기 출신들이 5·16쿠데타 이후 중앙정보부 창설 요원이 됐다.

‘상명하복’의 원리로 운영되는 조직 특성과 한국전쟁을 거친 뒤 이루어진 성장 때문에 군대는 정예 병력 70여 만 명을 보유한 가장 조직적인 사회 집단이었다. 여기에 많은 수의 군인들이 미국 유학을 다녀온 탓에 다른 어느 사회집단보다 서구 문물을 익힌 근대화된 집단이었다. 가장 근대화되고 조직화된 집단으로 성장한 한국군은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변할 잠재력이 있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미국은 한국 군부가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평가했다.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전망한 『콜론보고서』

에서는 정당 정부가 완전히 실패하면 군부 지배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다. 1961년 5월 16일, 그 예상은 현실이 됐다.

## 5·16쿠데타는 어떻게 진행됐나

쿠데타 세력은 한날 한꺼번에 모이지는 않았다. 쿠데타 세력의 형성과정은 4·19를 전후한 시기의 한국 사회의 변화를 담고 있다.

4·19를 겪은 한국 사회와 군부는 새로운 변화와 마주했다. 사회에서는 3·15부정선거와 유혈진압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허정 과도정부와 장면 정권은 이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법원에 들어가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 이승만 정권기의 과거사 폭로와 청산 요구가 잇따랐다. ‘김성주 살해 사건’, ‘백범 암살 사건’, ‘거창양민학살 사건’을 비롯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폭로와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졌다. 결국 김성주를 살해한 원용덕은 헌병 사령관 직위에서 파면·구속됐고, 안두희는 검찰에 소환돼 재조사를 받았다.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것과는 별도로 이승만 정권기에 억눌려왔던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민중들의 운동이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이승만 정권기에 어용조직에 불과했던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 다시 정비했고,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다. 이승만 독재의 칼날 아래에서 숨죽였던 ‘평화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되살아났다. 오직 ‘북진통일’만을 외쳤던 것에서 벗어나 ‘평화통일’을 위한 다

양한 생각들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북한을 더 이상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포’로 규정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했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가 처음으로 외쳐졌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을 향한 기대를 만끽했다.

이 시기 군부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터져 나왔다. 우선 3·15부정선거의 책임과 과거사 청산의 문제였다. 육군에서는 3·15부정선거의 책임을 물어 육군 특무대장 하갑청 소장과 제6관구 사령관 엄항섭 소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성주 살해 사건’의 주범인 원용덕을 파면한 뒤 군법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3·15부정선거에서 이기붕을 지지한 상급 장교들의 성향과 부하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 태도에 대한 하급 장교들의 불만이 커졌다. 군부의 불안한 분위기를 감지했던 과도정부는 고위급 장성들을 퇴임시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은 유능한 장성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강제로 예편시켜 한국군 통솔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정군운동’에 반대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최경록은 미국의 입장이 ‘내정간섭’이고 정군 문제는 한국군이 밟아야 할 ‘당연한 과정’이라며 지휘 수사권을 발동해 강력한 정군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결국 하급 장교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송요찬, 최영희 등이 육군 참모총장의 직위에서 물러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요구대로 정군 방침이 진행됐다. 제2군 사령관 장도영의 육군 참모총장 승진이 대표적인 예이다. 장도영은 군대 내에서 ‘이기붕의 양자’로까지 알려진 정군 대상자였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예편되기 전 구제돼 오히려 육군 참모총장으로 승진했다. 강력한 정군 방침을 표명했던 최경록은 육군 참모총장에서 제2군 사령관으로 좌천됐다.

다음으로 군부의 정치참여 문제가 본격 제기됐다. 이 시기 군부는 어느 때보다 정치참여를 희망했고, 4·19를 거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특

히 4·19 직후 발표됐던 계엄령을 이용해 군정을 수립하려는 방안이 제안됐다. 4·19 직후 군부 일각에서 정치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므로 과도정부 국방장관 이종찬은 제헌절을 맞이해 중앙청에서 3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 각 군 주요 지휘관을 모아놓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헌법 준수식’을 치렀다.

박정희와 육군본부의 일부 장교들은 이미 4·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쿠데타를 계획했다. 5·16쿠데타를 일으킨 장교들은 육군 참모총장인 송요찬을 찾아가 ‘육군사관학교생도의 시위’ 등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정권을 잡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송요찬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거절하자, 이들은 송요찬 퇴진운동인 ‘정군 운동’을 벌였다. 1960년 5월 2일 박정희가 송요찬에게 보낸 편지로부터 촉발된 ‘정군 운동’은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육사 8기 출신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5월 8일 ‘연판장 사건’, 9월 24일의 ‘하극상 사건’ 등에 관여하면서 중장급 이상 장성들의 퇴진을 요구했다.

‘정군 운동’은 군대 안팎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으나, 정작 이를 주도했던 육사 8기 출신들은 이미 ‘정군’이 아닌 장면 정권을 뒤엎는 쿠데타를 모의했다. 1960년 9월 10일 낮에 육군본부에 근무하던 육사 8기 출신 9명은 국방장관을 찾아가 정부의 구체적인 정군 계획 방침을 듣고 정군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려 했으나 국방장관을 만나지 못했다. 이날 밤 ‘총무장’이라는 일식집에 다시 모인 이들은 평화적인 방법의 정군을 포기하고 무력으로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이른바 ‘총무장 결의’를 했다. 그리고 지도자로 김종필의 처삼촌이며 이전부터 쿠데타를

모의했던 군수기지 사령관 박정희 소장을 추대했다.

‘총무장 결의’로 시작된 쿠데타 조직은 확대됐다. 육군본부에 근무하던 육사 8기 출신들은 서울의 인근부대(제6관구 사령부, 30사단, 33사단)을 중심으로 세력 확대와 결집을 꾀했고, 후방 각 부대의 지휘관(제2훈련소장, 제31사단장, 제37사단장, 군수기지사령부 참모장)들이 쿠데타에 참여했다. 5월 16일 당일 쿠데타군을 직접 동원했던 육사 5기 출신들도 참여했다. 1961년 3월경 쿠데타 실행을 위한 조직체계와 인선이 대부분 끝나쳐졌고, 거사일 확정(4월 19일)과 작전 등이 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4월 19일 정부의 폭동진압계획에 따라 출동한 부대(6관구)를 움직여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4·19 1주년이 평온하게 지나가자 계획은 무산됐고, 그 뒤 5월 12일 계획도 사전에 누설돼 최종적으로 5월 16일로 수정됐다. 5월 14일 약수동 김종락(김종필의 형)의 집에서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 주도세력이 모여 최종점검을 끝마쳤다.

5월 16일의 계획도 제30사단에서 누설됐으나 쿠데타 세력은 계획대로 진행했다. 이날 새벽 2시 이후 제6군단 포병단과 제1해병여단, 제1공수특전단 등이 출동했다. 총 3,000여 명에 불과했다. 한강교에는 쿠데타군을 저지하려는 헌병대원 100여 명이 있었다. 무력으로 한강 저지선을 돌파한 쿠데타군은 육군본부를 점령했다. 육군본부에서 대열을 정비한 쿠데타군은 서울 시내로 진입, 주요 시설물에 병력을 파견했다. 새벽 4시 30분경 쿠데타군은 서울 시내를 장악할 수 있었고, 새벽 5시에 남산 방송국에서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 미명을 기하여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어 오전 8시경 육군본부에서는 육군본부 참모진과 쿠데타 세력 간의 합동회의가 열렸다. 협의는 결렬됐으나 쿠데타 세력은 계엄령을 선포했고,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과 박정희는 청와대로 윤보선 대통령을 방문해 계엄령 추인과 친서를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5월 18일경 쿠데타는 성공하게 됐고 미



국도 이를 인정함으로써 군사정부(이하 군정)이 수립됐다.

군부 내에는 쿠데타를 반대한 인물들이 있었다. 제1군 사령관 이한림 중장, 제6군단장 김응수 중장, 육사교장 강영훈 중장, 제8사단장 정강 소장 등이었다. 이한림은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뚜렷하게 반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윤보선의 ‘유혈 방지’ 편지와 미 군사고문단의 방문을 받은 뒤에 묵인했다. 결국 그는 5월 18일 쿠데타군에서 파견한 장교들에게 지휘권을 뺏긴 채 서울로 압송됐다.

정강과 김응수는 쿠데타를 진압하는 작전을 계획했으나 상부 승인이 없어 병력을 출동시키지 못한 채 서울로 압송됐다. 강영훈은 육군본부를 방문해 ‘군의 정치개입’에 반대하며 육사 생도들의 동원을 반대했다. 이들은 모두 이북 출신이었고,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 세력 내부에 공산분자가 많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이들은 쿠데타 진압을 실행하지 못한 채 무장해제 당했고, ‘반혁명사건’으로 이른바 ‘혁명재판’에 회부됐다.

## 5·16 쿠데타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쿠데타가 성공한 뒤 군부는 민간사회를 통제했다. 무엇보다 먼저 행정권과 사법권 및 치안권을 장악했다. 5월 20일에는 내각과 서울시장, 5월 24일에는 각 시·도지사 등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 책임자들이 모두 현역 군인으로 교체됐다. 5월 31일에는 대법원 감독관, 6월 1일에는 심계원(감사원 전신)과 검찰위원회, 혁명재판소와 혁명감찰부, 내무부 치안국 등 사법부와 검찰기구의 책임자에도 현역 군인들이 임명됐다. 6월 16일에는 각 도 경찰국장에 현역 군인

들이 임명됐다. 7월 25일에는 각 도 경찰국 정보과장에 현역 소령을 임명해 군정이 치안권과 정보를 장악했다.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군부를 통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5월 26일 쿠데타에 반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휘관들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장면 정권 아래에서 벌였던 정군 대상 인물들이 다시 등용됐다. 6월 12일 미국에 유학 중이던 송요찬(7월 3일 장도영을 대체하여 내각수반으로 임명)이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1962년 4월 4일에는 전 육군 참모총장 최영희가 주티카대사에 임명됐다. 해외 대사직에는 주로 퇴역 장성들이 채워졌다. 1961년 6월 12일 주미대사 정일권, 6월 25일 주필리핀대사 이형근, 주이태리대사 이종찬, 6월 29일 주대만대사 최용덕(초대 국방차관), 주프랑스대사 백선엽, 7월 1일 주서독대사 신용균이 각각 임명됐다. 최용덕을 제외한 모두는 육군 참모총장(신용균은 참모총장 대리)을 지냈다. 미약한 정권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군부 원로급 인사, 그 중에서도 육군 장성 출신들을 임명했던 것이다.

군의 진급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4일부로 장성급(육군에서는 24명)을 예편시켰고, 7월 30일부로 국방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 10,201명을 전역시켰다. 곧이어 8월 15일에는 논공행상격의 진급이 이어졌다.

군정의 정책 목표는 5월 16일 군사쿠데타의 발발과 동시에 발표된 이른바 ‘혁명공약’에 잘 드러나 있다. 이 공약에서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의 봉기 이유를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표로 ①반공체제의 재정비 강화, ②유엔헌장 준수와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 ③사회악 일소와 청신한 기풍의 진작, ④민생고의 시급한 해결과 자주경제 재건, ⑤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 ⑥민정이양 등을 제시했다.

군정은 먼저 반공체제를 재정비했다. 1961년 5월 22일까지 전국에서 약

2,000여 명이 용공분자 혐의로 검거됐다.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의 제22조 제1항에 의거해 특수범죄처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7월 12일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가 발족했고, 혁명검찰부에서는 1961년 12월 11일부로 공소 기간을 만료했다. 이 기간 동안 총 550건/1,473명의 사건을 접수했다. 죄목별로는 반국가적 사건이 225건/608명으로 제일 많았고, 3·15부정선거 사건이 163건/396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혁명재판에 회부됐다. 혁명재판소는 1961년 7월 29일 재판을 시작해 1962년 4월 27일 서상일 외 13명의 중앙통일사회당 사건을 비롯한 총 6건/25명에 대한 최종 언도공판을 마침으로써 그 임무를 완료했다. 총 250건/657명의 재판에서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 사건이 98건/223명이었고, 특수반국가행위 사건이 56건/215명이었다. 반공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7월 3일 반공법이 공포됐고, 새로 출범한 재건국민운동본부의 실천 요강에서 ‘용공사상의 배격’을 제1의 과제로 내세웠다.

군정에서는 사회악 제거와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폭력불량배의 근절로 사회의 명랑화를 기한다며 총 87,487명을 검거해 총 1,243명을 검찰과 사법기관에 송치하고, 18,055명을 즉시에 회부했으며, 3,246명을 국토건설사업장에 취업시켰다. 1961년 5월 22일 최고회의 포고 6호를 발표해 구호·학술·종교단체와 기타 최고회의에서 허가하는 단체를 제외한 모든 정당·사회단체를 5월 31일부로 해산시켰다. 1962년 3월 16일 군정은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인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윤보선은 3월 22일 하야 성명 발표와 고별회견을 가졌다. 그의 하야는 3월 24일 최고회의에서 통과됐고, 이날부터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4,374명이 이 법에 의거해 정치활동을 제한 받았다. 이들 중 2,598명이 심판을 청구해 1,336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1963년 2월 27일 3,000명이 해금됐다. 언론 통제도 강화됐다. 군정은 “구정권 하에서의 언론의 공기성을 망각한 방종과 난맥상을 숙정(肅正)한다.”며 총 1,170개의 언론기관을 대폭 정비했다. 1961년 9월 12일 언론기관의 자율적 정화와 숙정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창립했다.

군정은 “인간 개조와 경제 재건의 과업을 성취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각성을 촉구하고 국민 한 사람이 혁명의 주체의식을 갖고 역사적인 국민혁명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적 창건의 침경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재건국민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은 쿠데타 주체세력 가운데 한 명인 강상욱이 산파역을 담당했다. 1961년 6월 10일 최고회의는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본부장에 유진오를 임명했다. 1961년 6월 12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재건국민운동전국촉진대회를 시작으로 7월 3일까지 각 도 지부별 촉진대회를 마쳤다. 그리하여 1963년 12월까지 11개 시·도 지부와 189개의 시·군·구 지부, 2,759개의 읍·면·동 재건위원회와 25,316개의 리·동·통 재건위원회를 두었고, 375,787명의 각급 위원을 두었다.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에 교육원을 설치하여 1~4주에 걸친 합숙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 민주주의교육 등이었다.

또한 3·1절과 4·19 기념일에 국기계양운동과 반공토론회 및 웅변대회와 반공국민총궐기대회 등을 개최했으며, 각종 생활과 관련된 공동작업 등을 실시했다. 재건국민운동이 관 주도로 실시되자 이 운동이 전체주의 운동이라는 비판과, 관제냐 민제냐는 논란을 비롯해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살펴보면, 가난한 이유를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며 그 해결 방안 또한 지극히 개인 차원에서 제시할 뿐이었다.

부정축재자 처리를 위하여 1961년 5월 28일 최고회의 산하에 부정축재처리위원회와 부정축재조사단을 설치, 운영했다. 그리고 6월 14일 부정축재 처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제1조사단원들이 조사 대상자였던 설원식, 정재호, 이양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구속된 배후에는 중앙정보부가 있었다. 김종필은 박정희에게 조사단원의 비위 사실을 보고했고, 그 결과 조사단원들이 구속돼 양인현을 비롯한 피고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주일 당시 최고회의 부의장의 제거를 목적인 사건이었다. 1962년 12월 3일까지 부정이득 취득자와 부정 공무원에 대한 환수 현황은 총 30명에 5,126,824,792환을 부과해 638,800,096환을 국고로 환수했고, 부정 공무원 29명에게 625,718,576환을 통고해 총 283,848,318환을 국고로 환수했다.

### 5·16쿠데타에 누가 참여했나

한국 근현대사에서 박정희만큼 다양한 군대 경력을 가졌던 인물은 드물다. 일제시기 만주 신경군관학교를 수석 졸업했고, 그 특전으로 일본육군사관학교에 편입했다. 일본육사를 마친 뒤 다시 만주로 돌아와 만주군에서 복무하다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 후 조선경비사관학교를 2기로 졸업한 뒤 육군본부 정보국과 보병 및 포병 등에서 군 생활을 경험했다. 군대에서 남로당에 가입해 1948년 11월 군 수사당국에 체포되기도 했으나, 과거 동료들의 명단을 넘기고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그를 수사했던 육군 정보국 소속 문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소령으로 군에 복귀했다. 한국전쟁 시기에 육군본부에서 근무할 때 부산정치파동이 발생하자 직속상관인 이용문과 쿠데타를 모의했다. 박정희의 경험은 5·16쿠데타 세력이 형성되는 데 커다란 밑천이 됐다. 쿠데타 세력은 1960년 5월경부터 결집하기 시작했고, '총무장 결의'를 한 육사 8기 출신들이 박정희와 회합을 가진 1960년 11월부터 1961년 4월까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쿠데타 조직에 모였다.

가장 주목되고 결집력이 강했던 집단은 육사 8기 출신이었다. 이들은 1960년 5월의 '정군 운동'에서부터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박정희를 지도자로 내세우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육사 8기 출신들이 쿠데타 기획단계에서부터 강한 결속력을 보이며 움직인 이유가 있었다. 이들은 1950년 5월경에 중위로 진급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9기생들과 함께 소대장으로 전투에 참가했다. 다른 기수나 사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생자가 많았다. 그렇기에 이들은 나라를 지켰다는 긍지와 하급 장교로서 생사를 같이했다는 결속감을 지녔다. 지연과 학연을 떠나 육사 8기 출신이라는 동질성으로 움직였다. 실례로 6군단 포병단 출신인 신윤창은 쿠데타 직후 김종필과 중앙정보부를 제거하려는 육사 5기 출신들의 시도를 문재준에게서 듣고 그 정보를 김종필에게 알려줘 육사 5기 출신들의 계획을 무력화시켰다.

육사 8기 출신들이 활발하게 정군 운동과 쿠데타 모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수가 육군본부에 근무했기 때문이다. 4·19를 전후한 시기 육군본부에는 육사 8기 출신들이 120명 정도 근무했다. 대부분이 중령이나 대령으로 각 참모부의 핵심실무를 담당했다. 작전참모부에 김동환과 옥창호, 정보참모부에 최준명과 김종필, 군수참모부에 신윤창과 이석제가 있었고, 길재호는 군사연구발전국, 김형욱은 작전참모부, 오치성은 부관감실, 이택근은 참모총장의 비서실에 있었다.

이들은 틈나는 대로 구내다방이나 김형욱의 사무실에 모였고, 석창희, 오상균, 정문순 등도 자주 어울렸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사회나 군부의 문

제를 토의했고, 사회 분위기와 자신들의 불만을 융합시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쿠데타를 선택했다. 김형욱의 회고에 따르면, 육사 8기 출신들은 좌절감과 불만이 깊었다.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던 것은 자신들인데 도망가느라 바빴던 인물들이 별을 달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이들은 4·19 전부터 쌓여 온 불만을 해소할 방법으로 쿠데타를 계획했다. 그러나 이들은 육군본부와 연대의 참모진이나 대대장급이었기 때문에 직접 부대를 동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쿠데타를 모의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쿠데타 성공 뒤에도 일선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었던 이들은 최고위원직을 차지해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했다. 한편 김종필은 정권유지 및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차장 서정순 등 육사 8기 출신들이 부장, 차장, 국장, 과장 등의 지위를 독식하다시피 했다. 또 방준모·석정선·석창희·이병희·김진구·고제훈·전재구·전재덕·강창진·이창수·김영민·표대현·정무식·김상년·엄별길·김성룡 등 쿠데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8기 출신들이 새롭게 편입됐다. 육사 8기 출신들은 1963년 민정이양기에는 민주공화당 창당에 참여해 많은 수가 국회로 진출했다.

다음으로 쿠데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집단은 육사 5기 출신이었다. 5기 출신은 미군정기에 순수 민간인을 대상으로 뽑았던 최초 기수였다. 입교생의 많은 수가 월남민 출신으로 과거 우익청년단체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많았다. 이들은 주로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의 장교들로서, 출신지는 경기 김포 출신 김재춘을 제외하고는 모

두 월남한 이북 출신이었다. 송찬호와 이원엽은 일본군 출신이었으며, 박춘식은 만주군 간도특설대 출신이었다. 채명신은 서북청년회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지녔다. 육사 5기 출신의 장교들은 쿠데타 당시 준장이나 대령이었다.

이들도 육사 8기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진급 적체 문제에 직면했다. 사단장 또는 참모장에 있으면서 일선부대를 지휘했던 육사 5기 출신들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는 주력부대를 지휘했다. 5월 16일에 예정대로 출동한 부대는 제6군단 포병단과 제1해병여단, 제1공수특전단, 대구에서 제2군사령부 공병대뿐이었다. 이 부대의 지휘관들 중 해병대 김윤근을 제외하고는 모두 육사 5기 출신이 사단장 또는 사령부 참모장으로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반쿠데타 세력들이 진압작전을 계획할 무렵 이들의 무력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병력의 동원도 채명신과 박춘식이 사단장으로 있던 제5사단과 제12사단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실제 군을 동원했지만, 그 뒤 김종필을 주축으로 한 육사 8기 출신들의 견제로 ‘장도영 일파 반혁명 사건(일명 텍사스 제거 작전)’에 연루돼 대부분 제거됐다.

이북 출신이 대다수였던 육사 5기 출신들은 심한 견제를 받았다. 훗날 현역에 복귀해 주월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채명신도 ‘주체세력인 이북 출신에 대한 견제가 심했으며, 그 때문에 곧바로 군복을 벗지 않는 조건으로 감찰위원장을 맡았다.’고 회고했다.

다음 집단으로 만주군 출신과 육사 9기 출신이 있다. 만주군 출신으로는 김동하, 김윤근, 박임항, 이주일, 송석하, 최주중, 윤태일 등이 있었다. 이 중 박임항, 이주일, 김동하, 윤태일 등은 만주 용정 광명중학 출신이다. 이주일, 박임항, 윤태일 등은 신경군관학교 1기 출신으로 일본육사(56기)에 유학했다.

이주일은 함북 출신으로 육사 특임 7기로 임관했고, 쿠데타 당시에는 임시소장으로 제2군사령부 참모장이었다. 그는 박정희가 대구에서 서울을



왕복하는 동안 후방지역의 조직을 담당했고, 비록 최경록의 제지로 후퇴했지만 일시적으로 5월 16일 대구에서 제2군을 동원하여 쿠데타에 참가했다. 최주종은 함북 출신으로 신경군관학교(3기)와 일본육사 그리고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했다. 5·16쿠데타 당시에는 제31사단장으로 광주에서 쿠데타에 동조했다. 윤태일은 서울 출신으로 특임 7기로 임관했으며, 4·19 직전부터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에 참여했다. 그는 5·16 당시 국방대학원에 있었으며, 쿠데타에 반대한 만주군 출신의 제1군 사령관인 이한림을 설득했다.

박임항은 함남 정평 출신으로 해방 직후 북한으로 가 인민군 창설에 관여했고, 그 뒤 월남했다. 조선민족청년단에 들어갔다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뒤 육사 8기 특임으로 임관했다. 5·16 당시에는 제6군단장으로 직속상관이었던 이한림의 출동명령을 거부했다. 1964년 4월 28일부로 군대에서 제적된 뒤 5월 1일 특정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송석하는 만주 장춘 출신으로 만주봉천군관학교를 졸업했다. 해방 뒤 육사 2기로 입교하여 쿠데타 당시 준장 계급으로 국방대학원에 입교한 상태였다. 신경군관학교 출신의 김동하와 김윤근은 해병대에 입대했다. 함북 무산 출신의 김동하는 쿠데타를 모의하던 시기에 예비역이었고, 김윤근은 김포 주둔 제1해병단 단장이었다. 이들은 해병대를 동원해 쿠데타가 성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만주군 출신들은 박정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북 출신이었다. 만주군 출신은 정치참여 성향이 어느 집단보다 강했으며, 4·19 직전에 수립된 박정희의 쿠데타 계획에 참여했다. 이들은 1963년 민정이양을 앞둔 시점에서 터진 '군 일부 쿠데타 사건'에 연루돼 권력 핵심부에서 제거됐다.

이외에 박정희나 육사 8기 출신의 설득에 따라 개인적으로 쿠데타에 참여한 인물로는 최홍희, 한웅진, 장경순, 유원식, 김용순, 김진위 등과 육사 9기 출신들, 그 외 차지철을 비롯한 중급 장교들이었다. 강상욱, 김제민, 박순권, 김원희, 정치갑 등이 육사 9기 출신이다. 최홍희는 함북 출신으로 일본군 학병 출신이었고, 해방 직후 우익 사설군사단체였던 학병단을 만들었다. 군역을 졸업한 뒤 임관해 한국군에 태권도를 보급시켰고, 4·19 직후 육군 참모총장 송요찬에게 군정 수립을 권유할 만큼 군의 정치참여를 갈망했다. 그는 쿠데타 발발 당시 논산의 제2훈련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장도영에게 쿠데타 참여를 권유했으며 해당 지역의 병력 동원을 담당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유원식은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으나 일제시기에 일본군에 입대했다. 해방 뒤 육사 특임 8기로 임관한 그는 박정희와 함께 육군 대학에 입교했던 1958년 무렵부터 쿠데타를 모의했다.

장경순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일본 동양대학 전문부를 졸업하고 일본군에 입대했다. 그는 해방 뒤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1948년 육사 특임 7기로 임관했다. 육사 참모장, 육군 제2훈련소 참모장, 육군 정보학교장 등을 지낸 뒤 쿠데타 당시에는 보직대기 상태였다. 한웅진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일본 중앙대학 법과를 졸업한 뒤 일본군에 지원한 지원병으로 준위로 제대했다. 육사 2기로 임관한 뒤 육사교관, 6연대, 8연대, 2여단, 7사단, 5사단을 거쳤다. 1950년 3월부터 육군 정보국, 육군본부 감찰감실, 보병학교, 9사단을 거쳐 1954년에 육군대학을 졸업했다. 4·19를 전후한 시기에는 국방연구원을 거쳐 육군정보학교 교장이었다. 한웅진과 장경순은 정보장교 출신으로 박정희가 4·19 직전 쿠데타를 모의하는 단계에서부터 5월 16일 거사 당일까지 박정희와 함께 행동할 정도로 정치참여 성향이 강했다.

김용순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육사 3기로 임관했다. 쿠데타 당시에는 군수기지사령부 참모장으로 4·19 직전 박정희 쿠데타 계획에 참여했다. 그는 김종필이 중앙정보부장 직에서 물러나자 45일 동안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김진위는 강원도 출신으로 일본군 지원병 조장을 지냈다. 해방 뒤 육사 특임 3기로 임관한 뒤 쿠데타 발발 당시 제37사단장으로 쿠데타에 동조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4·19를 전후해 군부의 정치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육사 9기 출신들은 원래 동기회장인 강상욱의 주도 아래 18명 정도가 쿠데타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준비과정에서 14명이 이탈하고 강상욱을 비롯하여 김제민, 박순권, 김원희, 정치만 등만이 남았다. 이들은 모두가 이북 출신이었다.

쿠데타에 참여한 세력들 중에는 민간인 출신들도 있었다. 김용태, 남상욱, 고진영, 이학수, 장태화, 김덕승 등이었다. 민간인 출신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장태화와 김용태이다. 이 두 사람은 육군본부 정보국 문관으로 근무하면서 박정희와 개인적인 유대감을 키웠던 인물들이었다. 장태화는 그의 형이 박정희와는 대구사범 동창이었고, 자신은 1949년부터 1950년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문관으로 근무했다. 이곳에서 그는 박정희를 비롯해 유양수와 김종필 등을 만났다. 1960년 4·19시기에 그를 다시 만난 박정희는 쿠데타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그 뒤 쿠데타 준비에 본격 합류한 장태화는 각계각층에서 수집한 정세보고를 정기적으로 박정희에게 제출했다. 또한 그는 박정희에게 각국의 쿠데타 관련 정보와 농촌 문제 등을 보고했다. 그는 쿠데타 세력들에게 “총정계가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는 역공작을 시도하도록 제안했고, 4·19 학생시위 유치공작 등의 각종 정보활동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다. 쿠데타가 성공한 뒤 중앙정보부장 고문과 서울신문사 사장 등을 지냈다.

김용태는 충남 출신으로 김종필과는 서울사범대학 동창이었고 충남 장항여중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한국전쟁기에 김종필의 도움으로 대구까지 피난을 가 박정희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했던 김용태는 입대하여 육군정보국에서 문관으로 박정희, 김종필 등과 함께 근무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충무공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쿠데타에 참여했다. 그는 김종필의 자금조달 부탁을 받고 거사자금을 구해주었다.

## 5·16쿠데타 무엇을 남겼나

1963년 12월 제3공화국이 출범했다. 쿠데타 주역들이 내세웠던 목표는 정권이 출발하기 전부터 무너졌다. 중앙정보부가 관련된 ‘4대 의혹 사건(새나라자동차 사건, 위커힐 사건, 빠칭고 사건, 증권 파동)’이 터졌다. 이 사건은 민주공화당의 창당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보부가 개입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신악이 구악보다 더하다.”는 말이 생겨났다.

정권 이양을 앞둔 1963년 초반 박정희는 여러 번 약속을 어겨가며 대통령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 과정에서 과거 정치인들을 ‘정치활동정화법’으로 손발을 묶어놓은 채 민주공화당을 조직했다. 민주공화당에는 육사 8기 출신들을 비롯한 군부 엘리트들이 대거 진출했다. 제3공화국의 권력기반이 형성된 것이었다. 결국 권력을 일부 정치군인들이 장악했다.

박정희는 군대 원리를 그대로 사회에 적용시켰다. 당 총재인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게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초라한 단상이었다. 간혹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 해임안 통과 등과 같은 반발이 있었다. 박정희는 이것을 군대에서의 ‘항명’과 같이 취급했다. 여당 의원일지라도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 납치당해 곤욕을 치른 뒤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다. 야당과 국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상계』의 폐간 및 장준하 암살, 김대중 납치, 최종길 교수 납치 살해 그리고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등 각종 조직사건이 만들어졌다. 특히 학생들의 저항이

강력해질 때마다 발동했던 ‘위수령’은 헌법에 관련 조항조차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박정희는 ‘위수령’을 발동해 학원을 짓밟았다.

박정희 정권기의 또 다른 특징은 국민들이 하나이기를 강요한 것이었다. 1973년 2월 8일 ‘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다. 다음날 치안국은 전국 경찰에 총 11개항의 단속 규정을 내렸다. 경찰관이 머리와 치마 길이를 재고 단속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또 <동백아가씨>, <아침이슬>, <미인> 등 수많은 노래들이 방송을 탈 수 없었고, 수많은 출판물이 진실을 말한 죄로 현대판 ‘분서갱유’를 당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도 군대식으로 추진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중반까지 ‘조국근대화와 경제 자립’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전투를 치르는 군대처럼 물러섬 없이 달려갔다. 흡사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나가는 돌격대처럼. 그 결과는 ‘전태일 분신’, ‘와우아파트 붕괴’ 및 ‘광주 대단지 사건’처럼 국민들에게 죽기를 강요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권은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일하며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군인이 되기를 강요했다.

1979년 10월 26일 죽기 전까지 박정희는 단 한번도 대통령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김종필, 공화당 신주류 3인방, 윤필용 등이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2인자 행세를 했지만 권력은 오직 한 사람만의 것이었다. 그 결정판은 1972년 10월에 발표된 ‘유신헌법’이었다.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을 결코 인정하지 않은 채 한 사람에 의한, 한 사

람만의, 한 사람을 위한 헌법이었다. ‘긴급조치’의 시대가 됐으며, 정권에 순종하지 않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총 9차례의 긴급조치 중에서 제1호와 제4호(1974년 4월 3일)에서는 비상군법회의를 구성해 민간인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했다. 제1호에 의해 장준하, 백기완 등 유신헌법에 반대했던 재야인사 33명이 비상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처벌받았다. 긴급조치 제4호에 의해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재야인사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까지 선고받았고, 인혁당 관련자들은 불과 하루만에 처형당해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는 얼어붙은 ‘겨울공화국’이 됐다. 이러한 현실을 개탄했던 시인은 교단에서 쫓겨나 감옥에 갇혔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시위는 돈 몇 푼에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한일회담’의 처참한 결과였다. ‘수출만이 살길’의 끝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달러 빛이었다. 뒤이어 IMF가 닥쳐왔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의 먹이사슬이 본격 형성된 것도 박정희 시대부터였다.

5·16은 한국 현대사를 근본에서 뒤흔들었고 많은 유산을 남겼다. 무엇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총구로부터 시작한 권력은 총구로 유지됐다. ‘6·3사태’, ‘10월 유신’에 이어 1979년 10월 18일 부산 일대 등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당시 부산에는 최정예 부대라는 공수부대가 투입됐고, 이것은 1980년 5월 광주에서도 똑같이 반복됐다. 계엄령 외에도 1965년 4월 19일과 8월 26일, 1971년 10월 15일에는 위수령이 내려졌다. 이렇듯 총구로 유지된 권력은 12·12와 5·18로 계속됐고, 그 끝은 제5공화국 출범이었다.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는 박정희 정권의 최대 유산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부는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다. 흡사 독재자가 다시 출현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슬픈 일이다. ~~5.16~~